

ISSUE & FOCUS

Newsletter 2017-12

한 해의 마무리와 2018 한선재단의 도전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2017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금년 한 해도 아쉬웠던 일들이 많았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하 '한선재단'으로 기술)은 재단 설립자이고 초대 이사장이었던 위공 박세일 명예이사장 서거의 슬픔과 어려움을 견뎌낸 한 해였다. 재단 밖으로 외연을 넓혀서 보면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다. 국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판결(3월 10일)과 대선(5월 9일) 그리고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취임식이 있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기존 관행과 방식을 벗어난 정책 발표와 '적폐청산' 작업으로 혼선과 갈등을 유발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도 2017년은 기존 질서를 뒤엎는 일들이 많았다. 이를 선도한 국가는 전후 국제질서와 자유무역을 이끌었던 미국이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에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도 탈퇴했다. 미국이 다자무역에서 발을 빼자 대신 기업과 시장을 억압했던 중국이 자유무역을 주창하고 나섰다. 세력다툼도 치열했다. 중국의 1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에 대해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맞서는 등 연중 내내 강대국의 세력경쟁과 합종연횡이 계속됐다.

이러한 국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한선재단은 연중 활발한 정책세미나와 연구활동을 전개했다. 먼저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가 문을 열었다. 연중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열린 이 세미나는 제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의 비전으로 시작됐다. 이어서 2017년 새해 벽두에 유명을 달리한 고(故) 위공 박세일 선생 유고인 '지도자의 길'을 두 번째 주제로 선정했다. '지도자의 길'에서는 <애민(愛民)과 수기(修己)>, <비전과 방략(方略)>, <구현(求賢)과 선청(善聽)>, <후사(後史)와 회향(回向)>의 지도자의 4가지 능력과 덕목을 제시했다.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와 별도로 정치, 경제, 복지, 교육, 과학기술 등 현안 이슈가 발생할 때에도 세미나를 개최하여 정론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정책연구 활동도 활발하게 펼쳤다. <제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 <국방개혁>, <정부개혁>, <대통령의 조건>, <민주주의 3.0>, <통일한반도 사회안전망> 등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정책지침서로 제시했다.

2017년 국방·안보와 외교

2017년 한반도 위기상황은 연중 내내 지속됐다. 북한은 2차례의 핵실험과 17차례의 미사일 발사, 북한군 병사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한 귀순과정에서 북한군의 총격사건 등 남북관계는 1년 내내 긴장의 연속이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남북관계 차원을 넘어선 국제적인 문제가 되었다. 북한이 괌 해역근처까지 도달하는 ICBM 발사(7월 14일)에 이어 6차 핵실험(9월 3일)을 하자 유엔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은 대북 제재를 강화했다.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대북 군사압박을 강화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내 정치권과 정부는 북핵 대응 조치인 사드배치조차 조율하지 못하고 혼란과 갈등을 유발했다. 이런 행태는 중국의 내정간섭 발언과 행동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은 사드배치의 원인 제공자인 북한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유독 우리나라의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사활을 건 듯이 외교적 공세와 중국내 롯데매장 폐쇄, 관광금지 등 경제제재를 가해왔다. 한 나라의 군사주권에 대해서까지 외교적 공세를 펼쳤다. 정부는 어떤 맞대응 조치도 하지 않았다. 중국의 부당한 경제적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중국의 눈치만 보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반면 기업들은 중국의 경제제재를 지역다각화의 기회로 활용하는 역발상으로 대응했다.

경색된 한중관계는 시진핑 2기 체제가 출범하면서 조금씩 정상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대중외교는 아쉬운 점이 적지 않았다. 특히 사드 추가배치 거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 배제,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3불 정책은 향후 중국은 물론 대미 외교에서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중국은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의 사용제한까지 요구하고 있다.¹⁾

문제인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는 피를 나눈 혈맹임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 한미FTA 재협상 문제 등으로 양국관계가 부드럽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과 국회 연설을 계기

1) 연합뉴스 보도(2017.11.24)에 의하면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는 한중장관 회담(11월 22일) 이후 한국은 3불에서 한발 더 나아가 '1한'(限)까지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한'은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의 사용을 제한한다.'는 의미이다.

로 일부 문제가 봉합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인식의 차이는 여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연설에서 한미 간 혈맹관계 형성과정과 반세기만에 세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성을 얘기하면서 남·북한 간 자유, 경제,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격차를 열거했다. 우리는 우리가 이룩한 성취를 동맹국 대통령을 통해서 확인했다.

국방과 안보는 국가의 제1책무이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북한의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그리고 중국의 과장된 외교와 경제공세로 안보와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다. 북한과 중국이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려는 전략적 목표를 공유한 나라임을 인식하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도 깨달았다. 하지만 안보를 동맹에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았다. 국제관계에서는 혈맹의 동맹관계도 자국 이익 앞에서는 무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는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자주 국방 즉 자강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론통합이 선결과제임을 절감했다. 국방안보문제까지도 여야 정당은 물론 국민까지도 갈등과 분열이 첨예화 하는 현실을 보았기 때문이다. 한선재단은 국론통합 위에 자강 능력이 갖추어질 때 동맹관계도 지속될 수 있고 이웃 나라와의 세력균형도 이룰 수 있음을 각종 세미나와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강조했다. 특히 하반기에 개최(11월 13일)한 ‘북핵 대응 군사옵션’ 세미나에서는 예방타격을 포함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5가지 옵션’과 ‘북핵 위협 대비를 위한 5가지 군사옵션’을 제시했다. 외교 분야에서도 새로운 4강 외교와 한중관계 세미나 등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했다.

‘적폐청산’의 과거 회귀와 소득주도 성장론의 한계

5월 10일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과거에 갇혀서 미래로 나가지 못했다. TV를 보면 수사, 구속, 재판 모습을 보지 않는 날이 별로 없었다. 적폐청산은 필요하지만 이 때문에 과거에만 매달리면 미래로 나갈 수 없다. 경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적폐청산을 이유로 기업가 정신과 성장 동력까지 훼손해서는 안 된다. 경제는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20년 전에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이를 경험했다. 다시금 그런 경제위기를 자초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현실은 IMF 구제 금융을 받았던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올수 있다는 경고가 그치지 않는다. 이 경구(警句)를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업무는 ‘일자리위원회’ 신설이었다. 일자리 창출은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을 만큼 시급한 과제였다. 2호 업무지시는 국정교과서 폐지와 5.18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제창’이었다. 이어서 3호 미세먼지 감축, 4호 세월호 사건으로 숨진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5호 서울 고검장의 돈봉투 만찬 감찰, 6호 4대강 사업 감찰, 7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였다. 내각이 갖추어지기 전이라 대통령 업무지시로 일들이 처리됐다.

‘일자리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과 2022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 창출 그리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발표했다. 이 세 조치는 현장에 곧바로 영향을 미쳤다. 첫 번째 시도된 비정규직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갈등만 남기고 무산됐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시작은 공공부문이지만 곧 바로 민간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결과는 고용축소로 나타날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리더라도 민간에서 받쳐주지 않

면 일자리는 늘어날 수 없다. 실질적인 일자리는 민간이 만들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파급영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역대 가장 높은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시간제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축소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이미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사업시설 관리 및 서비스업에서 27,000명, 음식점 종업원에서 22,000명 등 최저임금 대상 직종에서 일자리가 줄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2018년 1년간 보조금을 주기로 했지만 여야 원내대표 합의내용을 보면 2018년 이후에도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노동시장을 왜곡하면서까지 재정으로 지원하려면 왜 최저임금을 인상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가계소득을 늘려서 경제를 살리려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일자리가 늘어날 때 가능하지 일자리가 줄어들면 가계소득은 오히려 줄어든다. 경제성장이 될 때 일자리가 늘어나고 가계소득도 늘어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행히 초기의 소득주도 성장론의 기초가 혁신성장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그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과도한 정부개입은 금물이다.

금년에 사회적으로 큰 관심과 논쟁 그리고 갈등을 유발한 것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재개이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3개월간 일시 중단하고 공사 여부를 공론조사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정책을 공론에 맡기는 것도 문제였지만 이미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1조6,000억 원이 투자되고 종합공정률은 29.5%(시공 11.3%)인 상태에서 건설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로부터 시작된 찬반 논쟁과 갈등은 3개월 동안 지속됐다.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 구성에서부터 탈원전 정책 그리고 원전수출에 이르기까지 논쟁이 이어졌다. 시민참여단의 최종 투표결과는 건설재개가 59.5%로 반대 40.5%보다 19% 이상 높았다. 정부가 이 결과를 수용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은 유지기로 함으로서 향후에도 논쟁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지진이였다. 지난 해 9월 경주지진에 이어 금년 11월의 포항지진은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다시 일깨워주었다. 지진규모 5.8인 경주에 이어서 규모 5.4의 포항지진은 역대 2번째 강한지진으로 기록됐다. 지진에 이어 갑자기 몰아닥친 한파는 포항 시민들에게 더욱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다행히 인근 원자력 발전소는 이상이 없었다. 오히려 안전함을 입증했다. 정부는 포항지진이 발생하자 즉각 경보메시지를 보냈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예상보다 빨랐다. 수능시험도 1주일 연기되었다. 이는 시험 하루 전에 발생한 지진으로 안전을 고려한 조치였다.

국민의 안전은 국방안보 못지않게 중요하다. 예측이 어려운 천재지변에서부터 일상생활의 안전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는 높아졌다. 포항지진에서 보았듯이 정부의 안전 대비 인프라 시설 투자와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이 중요함을 알게 됐다. 국민 스스로도 일상생활에서부터 안전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안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국민적 인프라는 서로 돕고 배려하는 공동체 정신이다. 예방은 물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돕고 돕는 공동체 정신이 샘물처럼 솟아날 수 있도록 배려와 협력의 공동체 정신을 제고하는 환경조성에 나서야 한다. 그것은 공동체 성원간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고 소통하는 데서부

터 시작될 수 있다.

희망의 2018년을 기대하며

미래로 향하는 길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한선재단은 지난해부터 ‘국가 재창조 3대 전략’ 연구보고서와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세미나 등을 통하여 미래를 향한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대통령 탄핵으로 꺾일다시피 한 보수정당에 대해서는 통렬한 자기반성과 함께 비전 제시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박재완 이사장은 한선재단 창립11주년 기념, ‘보수의 반성과 우파의 혁신’ 세미나에서 “보수진영의 치열한 자성과 환골탈태를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보수의 공(功)은 계승하되 과(過)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우파 혁신의 방향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우파 본연의 가치인 ‘공동체자유주의’에 충실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정론에 따른 정책 마케팅에 진력해야 한다. 둘째, 중도실용 기조로 사회통합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응에 치중하는 ‘여민’(與民)과 책임을 부각하는 ‘위민’(爲民)이 조화를 이룬 세종(世宗)의 ‘여의’(與議)정치를 본받아야 한다. 지역·세대·소득계층의 저변을 넓혀야 한다. 생활정치 구현과 현장정책 개발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체계적으로 지도자를 육성하고 시민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2018년 우리는 국가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면서 과거를 넘어서 미래로 나가야한다. 분열과 갈등을 끝내고 국민통합을 이루어나가는 해가 되어야 한다. 국민통합 없이는 자강과 동맹은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발전도 헛된 구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자주국방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전시작전권 전환도 자주국방이 어느 정도 진전되었을 때 해야지 준비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중국의 외교적 경제적 간섭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대응전략을 강구하고 실천해나가야 한다.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협력과 통합으로 대처할 때 어떠한 압력도 극복할 수 있다.

지난 반세기에 걸친 산업화와 민주화는 우리가 이룩한 값진 자산이다.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가 세계2차 대전 후 독립한 나라 중 국가의 꿈을 실현한 유일한 나라임을 깨우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잘못 태어난 나라가 아니고 위대한 나라이고 희망의 나라임을 스스로 느끼게 해야 한다. 젊은이들에게는 오늘의 시대가 포기의 시대가 아니라 도전의 시대임을 알려줘야 한다.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것이 청춘’임을 경험을 통해서 배우도록 해야 한다. 주저앉지 말고 미래로 나가도록 용기를 불러 일으켜야 한다. 그러려면 한반도가 통일되고 통일된 한반도가 세계의 모범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 각자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각 분야별 개혁을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

우선 정치는 갈등의 정치에서 서로 협력하는 통합의 정치로 나가야 한다. 복지정책은 나누어주는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보다 국민 개개인이 노력하면서 스스로 성취해나가는 환경조성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려면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은 필수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려면 의식과 행동을 모두 바꾸어야 한다. 사법부 개혁 역시 미래로

가는 방향이어야 한다. 앞선 역대 어느 정권도 제대로 된 사법개혁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검찰을 포함한 사법부는 성역으로 남아있다. 때문에 가장 훌륭한 인재들이 모인 곳임에도 불구하고 퇴보한 집단으로 매도되기도 한다. 이미 시작된 사법개혁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흉내만 내서는 안 된다. 개혁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편을 갈라서는 더욱 안 된다.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어서라도 새로운 사법부로 다시 태어나서 삼권분립 정신에 맞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2018년은 지난 과거의 시대를 넘어서 미래를 여는 해가 되어야 한다. 희망의 2018년, 꿈이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역시 주어진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희망의 날개를 펼쳐나가는 2018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원 모두와 힘을 합쳐서 뿌리 깊은 싱크탱크로 발전해 나가고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 내 마음같은 정책을 만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후원문자를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